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평가토론회

후보 자질 및 정책 검증 보도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부산참여연대 강당
- 주최 : 2021부산·서울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 주관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행사 개요

사회 :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1.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종합 평가

-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토 론

KBS부산총국 정민규 기자

부산MBC 정은주 뉴미디어팀장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김천수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자 유 토 론

부록 [기획모니터] 성평등 모니터 보고서

지역언론의 후보 자질 및 정책 검증 보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종합 평가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2021부산·서울시장보궐선거 미디어감시연대](이하 부산미디어감시연대)는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산지역 일간지(국제신문, 부산일보)와 지역방송(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 뉴스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다.

모니터에서 나타난 언론의 보도경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번 보궐선거가 전임 여당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인데다, 대통령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 만큼 언론은 선거 구도를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심판) 여부에 주목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판세 보도, 유력 후보 행보를 중심으로 선거보도가 이뤄졌다. 소수 정당 후보와 정책은 홀대를 받았고 선거의 원인이 된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 의제도 언론의 주요 의제는 되지 못했다.

특히 후보의 자질과 공약 검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년 남짓 보궐 임기지만, 부산시정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후보의 시정운영 철학과 공약, 자질 검증이 필요했다. 선거 시기 유력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잇따랐지만 지역 언론은 적극적인 검증 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정치권과 후보를 비판하는데 힘을 쏟았다. 엘시티 특혜 분양, LH 사태, 국정원 4대강 사찰 문건 등 의혹과 발생 이슈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불리 전망에 치중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부산시장만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였던 만큼 후보의 자질과 경력, 정책에 대한 밀도있는 보도와 검증에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실제 보도는 검증보다는 후보 공방을 중계하고 갈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언론이 후보자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65%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또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거 보도 및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시민 인식'에 따르면, 서울유권자의 58.7%는 보도가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고, 61.1%는 사회 갈등을 유발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역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전문가 선거평가 및 향후 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 민주당 정책에 대한 실망이 공약과 정책 보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정권비판 인식과 더불어 언론이 정책과 후보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로 읽힌다. 이런 문제인식을 토대로 발표문에서는 부산미디어감시연대 모니터 결과를 중에서도 부산지역 언론은 후보 검증 보도 경향과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후보 검증 보도

1) 후보 검증 보도 전국 언론에서 집중 제기

3월 4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1위 유력후보에 국회의원, 청와대 홍보·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 직위 당시 행적과 재산을 둘러싼 의혹이 집중 제기되었다. (표1 참조)

김영춘 후보 관련 의혹	의혹제기 주체
측근 구청장에게 친형 부지 특혜 매입 의혹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의혹제기 주체
MB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 시기 '4대강 불법 사찰' 및 여론조사 의혹	정보공개 - 국정원 KBS 2/16 홍보기획관보고 문건 공개 MBC 3/24 <박형준 정무수석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 외
엘시티 관련 논란 -특혜분양·투기 의혹제기 -미술품 납품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및 딸 엘시티 아파트 보유, 특혜분양 의혹 제기 SBS 3/18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JTBC <'엘시티 납품' 미술품 10억어치 더 있었다> 뉴스공장 분양업무 담당자 최씨 인터뷰 "박형준 일가 매입 두 채, 시행사가 따로 빼둔 매물" 조선일보 4/5 <김어준에 '박형준 LCT 특혜' 제보자, 알고보니 사기 전과자>
딸 입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레스토랑 사업자 선정 지인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학생 수업권 침해 논란	한겨레 3/25 <박형준, 경선 때 수강신청 받고 첫 수업날 '후보 확정' 되자 폐강>
국회 조형물 특혜 의혹	MBC <"사무총장님 추천"...박형준, 국회 조형물도 특혜 의혹>
부인 명의 건물 미등기	부산MBC 3/23 <4년 전 건물 지어놓고..박형준 부인의 '수상한' 미등기> 3/24 <'수상한 미등기' 뒤늦게 재산신고..선관위 "진상조사">
주거용지 창고 건축, 건축법 위반	KBS부산 3/23 <박형준 후보 주거용 건물에 '불법 창고'>

성추문 허위 폭로자 매수의혹	국제신문 4/1 <“박형준에 5000만원 받고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 뉴스타파 4/2 <“박형준 아내,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에 개입” 검찰기록 입수>
-----------------	---

<표1>모니터기간 부산시장 후보에 제기된 의혹,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6대 의혹이라며 공세를 폈고 언론에서도 단독 보도 혹은 민주당 의혹제기에 대한 추가 팩트 체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은 대부분 전국지, 전국방송에서 이뤄졌다. 박형준 후보는 해당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단순 실수라 해명했고 지역 언론은 의혹을 적극 제기하기보다는 공방으로 전했다.

후보 검증이 치우치기도 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역시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구청의 친형 부지 특혜 매입 의혹’ 정도였다. 지역 언론에서 발굴한 검증 이슈는 없었다.

지역언론 중에서는 부산MBC의 <신축 건물 4년째 등기 안 해..재산 신고 누락>(3/23), <4년간 미등기 건물..이제야 재산신고>(3/24), KBS부산 공용조 기자의 <주거용지 내 불법 창고...“법 위반 몰랐다”>(3/24)가 박형준 후보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발굴 제기했다. 두 보도는 재산 신고 내역을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후 보도해 지역성,현장성을 살렸다고 평가된다.

2) 후보에 제기된 의혹 ‘네거티브’로만 치부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방만 중계

이처럼 지역언론은 후보 검증에 주도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몰았다. <표1>에서와 같이 의혹제기는 정치권 혹은 지지자 그룹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언론 취재를 통해 제기되고 일부는 팩트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역 언론 보도 경향은 각 정당과 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발언을 따옴표를 이용해 그대로 실어나르는 공방 나열이었다. 의혹에 대한 추가 취재나 다른 취재원 인용은 거의 없었다. 특히 박형준 후보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국민의힘 측의 발언을 따옴표로 그대로 인용하여 ‘가짜뉴스’, ‘마타도어’,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선거용 정치공작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림 1> 국제신문 3월 12일 5면 박형준 국정원사찰 의혹 공방 보도



<그림 2> 부산일보 3월 12일 5면 박형준 의혹 공방 보도

3월 12일 국제신문 <여당, 박형준 사찰 연루의혹 문건 십자포화...朴은 법적대응 엄포>, 부산일보 <딸 입시 의혹에 '엘시티'까지 여, 박형준에 연일 십자포화>, <"허무맹랑한 네거티브 공세" 박 후보, 즉각 법적대응 나서>에서 국민의힘과 박형준 후보측의 '엘시티 특혜분양',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딸 대학 입시' 관련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반면 박 후보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제목에서부터 '허무맹랑한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거짓의 성', '어이없는 폭로', '갑툭튀 공

작’, ‘국정원 찌라시’, ‘터무니없는 공작 DNA’, ‘흑색선전’ 등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했다.

또 국제신문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약발 안 먹혀>(3/17)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으로만 평가했다. 해당 기사는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세가 지역 민심에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라며 두 후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후보검증과 여론조사 결과를 연결해 ‘약발 안 먹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 부산MBC 3월 14일 정책선거 실종 우려 보도

정책선거 실종을 우려하며 진흙탕 싸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3월 11일 KBS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국정원 사찰 논란 확산>, 부산MBC <김영춘 "사죄하라"..박형준 "정치공작">, KNN <부산시장 선거, '불법사찰' 공방 격화> 보도에서 ‘논란 확산’, ‘공방 격화’ 등의 표현으로 관련 의혹 제기에 팩트체크 없이 양측의 공방만을 중계했다. 부산 MBC 3월 14일 <4.7보선, 정책선거 실종..또 진흙탕 싸움으로?>에서는 기대했던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각 당의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됐다고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을 전했다. 이번 선거 역시 경제와 일자리 공약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하지만 검증없이 다음표로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격한 말싸움을 중계함으로써 선거를 ‘진흙탕’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언론이기도 했다. 유권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보도였다.

3) 의혹제기, 정치권 공방 혹은 검증보다 해명에 초점

3월 셋째주 박형준 후보 부인과 딸이 엘시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공세를 폈고 박형준 후보는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거셌다.

지역 언론은 취재에 나서기 보다는 정치권 공방을 전달했다. (표2 참조)

매체	날짜	헤드라인	프레임	합계
부산일보	15일	엘시티 청약 당첨자를 '특혜'로 문 민주당	공방	13건 (공방9 검증2 기타2)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	검증	
	16일	법정 다툼으로 번진 박형준 네거티브 공방	공방	
		민주당, 박형준 흠집내기 올인... 엘시티 특혜분양·딸 입시비리 등 무차별 살포	공방	
	17일	연일 의혹 제기예 고소·고발까지... 보선판 '엘시티 블랙홀'	공방	
		부산 보선 D-20... 진흙탕 싸움에 정책은 파묻혔다	공방	
		엘시티 앞 회견 '박형준 때리기'...지도부 부산 총출동한 민주당	공방	
		"서울 아파트 소유 김영춘" 역공...판 뒤집기 나선 국민의힘	공방	
	18일	부동산업계 "투기보다는 성공한 투자"... 박형준, 소유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	검증	
		[논설위원의 시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기타	
	[사설] 부산시장 보선,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건가	공방		
19일	김영춘 "가족 부동산 내역 공개하자"	공방		
	'엘시티 의혹' 특검 합의될까?	기타		
국제신문	15일	여당 "박형준 캠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해당 인사 "허위사실...법적 대응"	공방	7건 (공방5 기타2)
	16일	'때리고보자'식 투기 공방 집중...신공항 등 정책 실종 우려	공방	
	17일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악발 안 먹혀	공방	
	18일	박형준 "엘시티 두 채? 그 자체가 흑색선전"	공방	
		부동산 성난 민심 "금 집값상승 책임" "朴 엘시티 거주 불편"	기타	
		부동산 공방 점입가경...여당 "박형준 집 대마도 뷰" 야당 "박영선 집은 일본 왕궁 뷰냐"	공방	
	19일	[사설] <엘시티 특검, 부동산 전수조사 선거 뒤 흐지부지 안 된다>	기타	
KBS부산	15일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 '과열'...정책 실종 우려	공방	4건 (공방4)
	16일	투기 의혹 공방...'특별조사 기구' 추진	공방	
	17일	"엘시티 특검해야" vs "LH 투기 검찰 수사해야"	공방	
	19일	엘시티 공방 격화..."재산 공개하라" vs "흑색선전"	공방	
부산MBC	15일	여야 폭로전 vs 고발..난타전 불붙었다	공방	4건 (공방4)
	17일	민주당 엘시티 총공세..박형준 "특혜 불법 없다"	공방	
	18일	김영춘-박형준 "고가아파트" vs "흑색선전만"	공방	
	19일	엘시티 구매 경위 논란 확산	공방	
KN	1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혹'만 난무	공방	4건 (공방4)
	16일	시장후보 아파트 논란, 판단은 시민 몫	공방	

N	19일	박형준 “아들한테 매입.. 불법 없었다”	공방	
	20일	후보 등록 첫 주말, 치열한 공방	공방	

△ <표 2>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기사 목록

셋째주 엘시티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총 22건 보도되었는데 이중 검증은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방으로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 검증·해소를 표방한 검증 기사 2건은 모두 부산일보의 기사로 선거 기획기사였다. 부산일보는 3월 18일 ‘4·7쟁점현미경’ <부동산업계 “투기보다는 성공한 투자”… 박형준, 소유만으로도 이미 타격은 불가피>에서 박형준 후보 엘시티 소유를 다뤘다. 해당 기사는 ‘저층부인 탓에 인근 건물의 조망 간섭을 받아 로열층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탓에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했다’라며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과 일치하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인터뷰이는 모두 ‘한 공인중개사’,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 익명 처리했다.

하루 앞선 17일 노컷뉴스는 <엘시티 미분양이라 특혜 없었다?…“좋은 호실 미리 빼놔” 의혹 제기>(3/17)에서 “당시 미분양이라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안 좋은 호실만 남은 미분양”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후보에 대한 자체 검증 보도도 있었다.

국제신문은 ‘1대1 지상 맞대결’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으로 두 후보가 주요 이슈나 정책 등 상대의 약점을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불법사찰 의혹,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어반루프, 요즈마공약, 후보의 부산거주기간, 일자리 공약 등 현재 쟁점이 된 사안이 질문으로 나왔다. 하지만 기획의 형식 자체가 후보 간 소모적 논쟁, 공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었던 탓에, 상대 후보의 물음에 ‘아는 바 없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채워졌다. 후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따져 후보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가려줬으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검증의 역할을 후보에게 미룬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부산일보는 ‘유력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후보 검증’ 시리즈를 마련했다. 3회 걸쳐 재산, 병역, 범죄전력을 보도했다. 후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 등을 점검한 <박형준 부부 거주 엘시티 1채·기장 땅 1300평 등 재산 38억 추정>(3/16, 3면)은 박 후보 측 자료, 박 후보 측 설명, 박 후보 기자회견 등이 주요 기사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이번 엘시티 의혹이 ‘묻지마 의혹’, ‘선거공작’이라는 박형준 후보의 주장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또 ‘4·7 쟁점 현미경’ 기획을 마련해 ‘이언주 제기 ‘불법자금 의혹’(2/18), ‘박형준 불법사찰 개입의혹’(2/23) ‘박형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방’(3/12), ‘박형준 후보 엘시티 소유’ 등 후보에 대한 쟁점과 의혹을 짚었으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선거때까지 진위여부 밝혀지지

어려워 공방이 계속 될 것,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박형준 후보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등 검증을 통한 새로운 사실 발굴은 미흡했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증언해 줄 수도 있다고 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7일 부산을 방문했음에도 직접 취재하는 등의 다른 취재원에 대한 추가 취재나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었다.

4) 시민사회 의혹 제기 정쟁화 시키거나 무시

보궐선거에서 정당과 언론 외에도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의혹제기와 검증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언론은 시민사회 목소리도 정당 공방에 포함시키거나, 후보 우호세력으로 단정해 보도했다.

먼저 KNN은 3월 3일 <보선-35일, 여야 날선 공방전 격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토착비리 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제기한 오거돈 일가 가덕인근 투기 의혹 해명 촉구 등을 전했다. 두 사안 모두 지역 정치권의 특혜 비리 의혹 이슈인데 정당간 공방으로만 보도했다. 또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과 관련하여 박형준 후보에 대한 지역 교수들의 비판 기자회견을 친여 성향 대학교수도 거들었다고 여야 공방에 포함시켰다.

국제신문 <김영춘·박형준 우호세력 ‘외곽 지원전’ 치열>(3/18, 5면)은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는 가운데 우호 세력의 외곽지원전도 후끈 달아올랐다”며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의 기자회견도 이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의혹 자체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다.

박형준 후보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16일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 등 시민·환경단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박형준 후보의 불법사찰 의혹 대상이었던 환경단체의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이에 주목해 해당 사안만을 기사로 내거나 기자회견 외에 적극적인 취재에 나선 지역언론은 없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지면과 뉴스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2. 정책·공약 검증 보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공약과 정책도 쏟아졌다. 지역언론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소개하고 점검했는데,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소개·나열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공약 검증을 통한 반론 제기 등 심층성은 부족했다. 공약 보도량 자체가 부족했다. 각 당

의 후보가 확정된 3월 첫 주의 공약보도는 5개 언론을 모두 합쳐도 5건에 불과 둘째 주에는 3건으로 줄었다. 넷째 주에야 20건으로 늘었다.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는 마지막 유세전 등 후보 행보에 치중하느라 신문의 경우 국제신문 4건, 부산일보 5건 보도하는데 그쳤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충실히 전한 것은 KBS부산의 [공약검증K] 기획보도였다. 3월 셋째 주부터 [공약검증K]라는 시리즈명으로 총 11개 키워드를 주제로 전했다. 김영춘 후보 핵심 공약인 ‘가덕신공항’, 박형준 후보 공약인 ‘어반루프’ 외에도 노정현 후보가 내세운 ‘부산항미 세균실험실’ ‘소수정당 후보 공약’ ‘부동산 대책’ ‘원전’ ‘난개발’ ‘재난지원금’ 등 지역 현안을 고루 주제로 선택했다. 기획의도에서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으나 ‘어반루프’ 정도가 분명한 결론을 냈고 대부분은 후보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또 가덕신공항과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에서만 전체 후보 6명의 입장과 답변을 소개했고 예산 조달 방안 등 실현가능성 평가도 빠졌다.

부산MBC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공약대전]에서 ‘예산확보 방안과 중장기 과제대책’ ‘부동산해법과 양성평등 정책’ ‘코로나19 극복방안’ ‘4인4색 공약대결’을 보도했다. 소수정당 후보, 지역 현안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었으나 검증과 평가는 부족했다.

국제신문의 <김 9조대, 박 6조대...두 후보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들>(3/25, 4면)기사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영춘, 박형준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공약 및 추정예산 자료를 공개해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재원을 짚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1년짜리 사업이라기보다 민선 8기 연임을 가정해 책정한 공약과 예산임을 지적하며 “시민은 1년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원하는데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신문은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도 주요하게 실었다. 3월 17일 6면 전체를 할애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공공의료 강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 청년 정책 등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을 소개했다. 지역 의제를 반영했으나 정작 후보들의 정책 채택 보도는 비중이 적었다.

보도는 아니었지만 각 후보의 공약을 예산으로 분석한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빅벙커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3/25)도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방송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25일 방송되어 시의성도 있었다. 예산분석전문가, 행정·정책분석전문가, 정치비평가, 시민활동가가 패널로 출연하여 후보자 6명이 제시한 106개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을 짚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주요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더 꼼꼼히 짚었지만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 정규재 후보의 좋은 공약을 분석했다.

군소후보 공약은 여전히 주요하게 다루지지 않았다.

군소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된 보도는 국제신문 <"우리도 봐 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3/26), 부산일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3/26), KNN <군소 정당 후보들 소신 공약 '눈길'>(3/25) 보도가 있었다. 이들 기사에서는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후보의 주요 공약과 소신을 전했다. 검증보다는 공약 나열에 치우친 선거 캐치프레이즈 소개에 불과했다. 부산MBC도 <여야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3/26)에서 6명 후보의 1호 공약 검증에 나섰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공약 검증에 대부분의 리포팅을 할애하고, 군소후보 4명은 한 문장씩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소수 후보의 의미있는 공약은 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또 당선 후보가 시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3. 새로운 시도 - 유튜브 등 뉴미디어 영역

선거보도에서 지면과 뉴스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언론은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콘텐츠 생산에 적극 나섰다.

국제신문은 후보 인터뷰 형식의 '독한청문회'를 선보였다. 예비후보군부터 '살살히 파헤쳐보자'며 인터뷰를 벌였고, 김영춘-박형준 후보 끝장 토론회와 박재호-하태경 각당 선대위원장 토론 등을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매운맛토론회'를 통해 김영춘-박형준 후보 토론회를 역시 진행했다. 부산MBC는 '탈곡기'란 제목으로 정치토크쇼를 진행했다.

시간 제약을 넘어 심도깊게 질문과 토론을 하고 군소 후보까지 조명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장이지만, 실제 콘텐츠가 밀도있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후보간 토론이 많았던 것은 검증은 후보에게 맡기고 언론은 중계자로 빠지는게 아닌가 하는 회의를 들게 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장 온더 블록> 콘텐츠에서 정규재, 노정현, 손상우, 배준현 후보 길거리 인터뷰를 전했다.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선거에 대한 비판 등을 전해줬는데, 특히 소수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문제의식, 보수의자격, 미세균실험실, 가덕신공항반대 이유, 노동, 성소수자 문제 등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부산MBC 초청 토론회 중 나온 '원전 정책' 공방을 따로 떼어내 토론에서 나온 후보의 발언을 후속적으로 검증한 것도 후보간의 설전을 공방으로만 전달한 토론회 보도가 일색이었던 가운데 지역언론의 역할을 보여준 기획이었다.

다만 지역언론의 유튜브 콘텐츠 통한 시도나 공약검증이 뉴스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 새로운 사실이 검증되었다면 지면과 뉴스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토론1

검증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은 2021 부산시장 보궐선거 언론보도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1. 인물 검증과 공약 검증 없는 언론보도

1) 박형준 시장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시장 자신의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적절했는가!

● 엘시티 관련 해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 시장 후보 부인 소유 엘시티 : 정상적인 거래 → 아들과의 거래, 웃돈 1억 원
- 시장 후보 의붓아들, 딸 소유 엘시티 : 우연한 만남, 카페(?)에서 계약, 아들과 딸이 로얄층의 아래·위층 매입, 웃돈 각 700만 원, 500만 원, 중개수수료 없음
- 아들과의 거래를 처음에는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하고 말한 다음 바로 아들과의 거래로 드러남
- 아들과의 거래 당시 웃돈 1억이 적절했는가
- 2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우연한 만남으로 거래가 되었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 웃돈 700만 원, 500만 원도 당시 시세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음. 다운계약서였거나,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유분을 제3자로부터 매입했다는 의혹
- 시장 후보 의붓아들과 딸이 2015년 10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해명된 것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논란 정도로 치부하는 통 큰 자세를 보였다.

● 박형준 시장 후보 엘시티 의혹에 대한 부산지역 언론 보도

○ 부산일보 2021-03-17

박 후보 부부는 지난해 4월 10일 엘시티 저층부 75평형을 프리미엄 1억 원을 얹어 21억 1500만 원에 샀다. 앞서 박 후보의 딸은 분양계약 이후 분양당첨자에게 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20억 1100만 원에 매입했다. 박 후보 가족이 같은 동 같은 라인의 위아래층 아파트를 나란히 취득한 것이다. 박 후보 가족이 보유한 엘시티 B동 3호 라인은 광안대교 영구 조망이 가능해 가장 선호되는 타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층부인 탓에 인근 건물의 조망 간섭을 받아 로열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엘시티는 통상 20~40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박 후보의 딸은 엘시티 1차 분양 계약일 이후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다. 엘시티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탓에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박 후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한 지난해 4월의 경우 같은 평형의 프리미엄이 많게는 3억 원까지 형성됐다. 중도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자들이 간간히 급매물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엘시티 75평형은 21억 1500만 원~26억 5800만 원에 거래되다 다음 달에는 20억 10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 부부가 시세보다 1억 원가량 싸게 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특이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하지만 내부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농지를 사들인 LH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아파트 취득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 국제신문

2021-03-15

여야의 이 같은 ‘부동산 공방’은 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판을 키워 여당에 쏠린 의혹을 여야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번 보선에서 자칫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3-17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 엘시티라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어렵게 사시는 시민들에게 민망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좀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나 비리가 없는데도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가 아무리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저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사찰 공세도 안 먹히고 입시비리, 엘시티 특혜 분양도 가짜 뉴스로 드러나니 별별 희한한 거짓과 논리를 동원해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리석은 짓이고 수준 높은 부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참여연대가 자문받은 부동산에서는 분양권 매입 당시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고층보다 저층이 더 조망이 좋고, 미분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부산 일보는 정반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형준 시장 후보가 해야 하는 해명까지 기자가 알아서 해주고 LH와 비교해 LH의 불법투기와는 다르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불법투기인지, 특혜 분양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편들어 주기식 보도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부산일보 3월 22일 자 「박형준 의붓아들, 고급빌라 전전세 왜? 박 캠프 측 “불법 없음 확인”」, 3월 23일 자 「‘열세’ 김영춘, 고강도 압박 vs ‘우위’ 박형준, 무대응 일관」, 국제신문 3월 21일 자 「박형준 “아들에게 산 엘시티 적법 거래”…여당 “합법을 가장한 불법 증여 의혹”」, 3월 23일자 「“박형준 엘시티 20억 로또 두 번” vs “김영춘 서울집 10억 이익 봤다” 김영춘·박형준 TV 토론회…아파트 실제 가격 두고 설전」 등의 기사를 보면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심층 취재·보도는 보이지 않고 양측의 공방 또는 박 후보의 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를 보도하는 지역 언론은 합리적 의심에 바탕을 둔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증을 우선해야 하는데 이를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양측의 대결·공방으로 취급하여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이 아닌 정치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박형준 시장 후보 어반루프 공약 의혹에 대해 부산지역 언론 보도는 시민의 의문점을 해소했나?

● 제1호 공약이었던 어반루프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

○ 어반루프 도입이 기술적으로 지금 그리고 부산에 가능한 것인지는 논란보다는 어렵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다.(부산일보 2021-1-13)

○ 박형준 시장 후보는 미래기술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추진해야 자기 것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 임기 1년인 시장 후보의 공약이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도시 간에 도입해야 할 기술인 것에 대해 검증하고 비판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 제1호 공약이었던 어반루프와 관련한 테슬라 CEO와 화상회의 거짓 주장

○ 박형준 시장 후보는 3월 12일 KBS K토크 토론에서 토론을 마친 뒤 테슬라의 CEO와 화상회의를 한 것을 공개하겠다고 약속

○ 박형준 시장 후보는 3월 22일 KNN 토론에서 ‘테슬라의 CEO와 화상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이퍼루퍼 TT이고 테슬라가 관계하는 회사이고 우리말로는 자회사’라고 답변

○ 3월 26일 KBS K토크 토론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가 주장한 하이퍼루퍼 TT 회사는 테슬라가 관계하는 회사도 자회사도 아님이 드러남

→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무지해 이런 실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너무도 담백하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발언을 했다면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고 1호 공약에 대해 실수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이고 공부하지 않는 후보인데 어느 경우라도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2.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언론사 최소한의 객관적 보도는 있었나?

1) 김영춘, 박형준 최종 후보 확정 관련 기사

(1) 부산일보

○ 박형준 후보 확정 기사(3월 5일 자)

1면(5단)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선출... 54.40% 득표 ‘경선 압승’」, 4면(5단)에 「박형준 “이번 보선, 정권 폭주 제동 거는 선거 돼야 한다.”」 제목의 추가 기사를 실고 있다. 박형준 후보의 선출을 1면에 부각하고 기사 제목에 ‘경선 압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승자의 강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 김영춘 후보 확정 기사(3월 8일 자)

박형준 후보와는 달리 1면(5단)이 아닌 4면(4단)에 「3수 만에 본선행... 김영춘 “성공적인 부산 발전 보여 주겠다.”」이라고 실고 있다. 박형준 후보처럼 ‘경선 압승’과 같은 승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사는 없는 반면, ‘3수 만에’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다. 또 같은 면에 박형준 후보 관련 「박형준 선대위 ‘가덕 투기 조사단’ 구성」이라는 제목의 추가 기사를 실어서 김영춘 후보 선출 결과에 관한 관심을 결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같은 날 1면에 「김영춘-박형준, 30일간 ‘부산대전’ 막 올랐다」라는 제목의 두 후보 대결 기사를 실어서 3월 5일 박형준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는 1면에 박 후보의 선출 내용만을 실은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2) 국제신문

○ 박형준 후보 확정 기사(3월 5일 자)

1면(3단)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을 싣고 박형준 후보 단독 사진도 올렸는데, 내용과 사진 모두 박형준 후보를 단독 처리한 기사이다.

또 같은 날짜 5면(전면)에 박형준 후보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메인 기사 제목은 「난 시민이 원하는 합리적 지도자… 정권교체 발판 될 것」이며, 기사에 딸린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얼굴이 모두 드러나 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였다.

○ 김영춘 후보 확정 기사(3월 8일 자)

1면(3단), 5면(전면) 기사 배치로 일면 두 후보 기사의 분량은 같아 보이나, 1면 기사의 제목이 「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박형준과 맞대결」로 김영춘 후보 선출에 관한 기사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진 또한 김영춘 후보 단독이 아닌 박형준 후보 사진과 함께 올려서 박형준 후보 선출 때와는 대조를 보인다.

같은 날 5면에 실린 김영춘 후보에 관한 메인 기사 제목은 「비문 출신에 현역 지원 없이도, 당원·시민 표심 다 잡았다」인데, 계파 갈등, 힘없는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에 딸린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반 정도 가려진 상태였다.

→ 지역언론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를 보면 언론의 정치적 중립, 가치적 중립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저널리즘의 자존심이 실종된 부산지역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 선정적이고 공공성 부족한 언론 보도

● 여당, 박형준 겨냥 ‘닥치고 공격’…아직은 약발 안 먹혀(국제신문 2021-3-16)

● 부동산업계 “투기보다는 성공한 투자”(부산일보 2021-3-17)

● 박형준 후보 유세 중 지지자의 발언 중 누구나 (박형준 후보처럼) 부동산 투자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냐라는 발언 여과 없이 보도(KBS 뉴스)

▣ 토론2

후보 자질 및 정책 검증 보도 성과와 한계

KBS부산방송총국 정민규 기자

1. KBS부산방송총국 보궐선거 특징과 성과

KBS부산은 예비후보들의 등록 시점인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계를 가동했다. 초반에는 인력 여건상 정치 담당 기자 1인 위주로 예비후보들의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단신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거대 정당뿐 아니라 원외정당, 소수정당 후보들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후보들의 공약 발표는 취사선택하지 않고 촬영해 보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만약 시간적 제한으로 지역 9시뉴스에서 방송하지 못했다면 저녁 7시, 다음날 아침(광장/930) 뉴스를 통해서라도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KBS부산은 4.7보궐선거 관련 보도에서 기존 우리 언론의 고질적 문제인 경마식 보도에서 벗어나 정책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데 그 역량을 모았다. 일반적인 후보들의 동정과 유세, 정책 발표 등의 선거 보도는 물론 한발 더 들어간 심층있는 보도를 위한 전담팀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했다.

특히 9시 뉴스의 틀에서 벗어나 뉴스7을 통한 보도를 강화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 'K'시리즈를 통한 정책 검증 강화

① 공약검증K



KBS부산이 공을 들인 건 후보들의 공약검증이다. 11회에 나누어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비교하는 공약검증K는 단순한 공약 나열 차원이 아닌 검증에 방점을 찍었다.

보도명	일자
가덕신공항 비상할까?	2021년 3월 17일
꿈의 교통수단 ‘어반루프’...실현가능성은?	2021년 3월 18일
일자리 창출...해법은 제각각	202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공급확대” 해법은 달라	2021년 3월 23일
재난지원금 ‘찬성’ 지원 방식은 달라	2021년 3월 24일
난개발 해법은?...“공공”vs“균형”	2021년 3월 25일
양성평등 공약은?...근본 대책은 ‘부실’	2021년 3월 29일
원전정책은?...“탈원전”vs“재검토”	2021년 3월 30일
소수정당 후보, 공약은?	2021년 3월 31일
부산항 美 세균실험실 폐쇄...‘온도차’	2021년 4월 2일
‘단어’로 보는 여야 선거 전략은?	2021년 4월 5일

② 대담한K



뉴스7의 고정 코너인 대담한K에서는 양대 후보의 캠프에서 핵심 참모들이 직접 출연해 정책 대결을 펼쳤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공동선대위원장과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공동선대위원장은 스튜디오에서 마주앉아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였고,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갔다.

두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담한K에서 모두 5차례 맞붙었다. KBS부산은 일자리 공약 등 주요 공약을 상호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선거 판세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③ K토크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각종 의혹과 이슈들이 쏟아졌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직접 나서 이를 알리는 시간도 필요했다. 따라서 마련한 K토크는 보다 호흡이 긴 40~50분의 편성으로 알찬 토론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K토크에서 김영춘 후보와 박현준 후보는 2차례 토론을 벌였고 가덕신공항과 지역 경제 살리기 해법, 보궐선거 표심과 관련한 토론도 별도로 마련해 깊이 있는 분석의 장을 마련하였다.

- K터치



KBS부산은 기존 남천동 스튜디오를 벗어나 광안리 해수욕장에 보궐선거 개표방송만을 위한 별도의 특설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곳과 남천동 스튜디오, 서울 본사, 서울시청을 잇는 4원 생방송은 최초의 시도였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의 선거 결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거를 분석한 K터치 역시 첫 시도였다. K터치는 지역별, 성별 지지율 추이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탑재해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2. 인력 구조와 변화한 선거 과정에 직면한 한계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과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한 무관심은 이번에도 내부의 고민으로 작용했다. 뉴스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번 선거에도 존재했다.

인력 구조에서 문제는 이번 선거라고 달라지지 않았다. 혼탁 과열 선거로 넘어가지 않고 공약과 정책 위주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보다 깊은 검증을 해나가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의혹이 난무한 선거에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감한 선거 과정에서 자칫 보도로 빚어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법무팀 등과 논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적재적소에 발 빠른 보도를 치고나갈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개선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MBC 선거 방향과 평가-뉴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부산MBC 정은주 뉴미디어팀장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이번 보궐 선거 보도의 문제점은 ‘보궐선거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앞서 분석한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양당에 치우친 선거보도, 유권자 중심의 의제 설정 보단 양당 캠프 선거 전략에 휩쓸린 한계 등은 이번 선거 보도에서도 고질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각 언론사들의 사정도 있을 걸로 보인다. 이 토론문에선 지역 신문과 방송의 일반적인 선거 보도와는 다른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통한 선거보도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선거 보도와 관련, 지역 언론사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보도로 첫 주목을 받은 건, 지난 2019년 MBC경남이 2019년 보궐선거 당시 시도한 라이브 개표 방송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BH6Y_euDE) 당시 4시간여에 걸친 개표 방송은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누적 조회수는 최근까지 38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부산MBC에서도 지난해 총선 당시 ‘21대 총선 우째 됐노?’란 제목의 유튜브용 프로그램이 제작됐고, 개표 방송 역시 8시간여에 걸쳐 진행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지역 방송은 물론, 지역 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 관련 아이템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하지만 그 형식은 많이 다르지 않았다. 시장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후보들의 주요 경력과 공약, 최근 논란 등을 캐묻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저비용 제작방식이 허용되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자 한계라 할 것이다.

부산MBC 역시 ‘탈곡기’란 제목으로 후보들을 초청해 정치 토크쇼를 진행했는데, 기획 의도와는 달리 후보들을 ‘탈탈 털만큼’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았다. (부족한 제작 인원과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역시 모든 지역언론사들이 처한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유튜브 플랫폼 역시, 많은 인원과 비용이 투입 가능한 서울지역 매체의 시장 우위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MBC 뉴미디어팀도 나름의 기획을 통해 이번 선거 보도를 준비했다. ‘선거톡톡’이란 코너를 마련해 이번 선거의 의미와 관련한 세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https://www.youtube.com/watch?v=Xvx323cDt9g&list=PLwxnUGBLm2eT5DOxE8ijfrVDVCzvdLQwk&index=52>)

20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자는 의도로 ‘후보 MBTI 검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해 유권자와 쌍방향 소통도 시도해 봤다.

또, 선거 공보물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의미를 유권자에게 전달해주려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각 후보자의 정책과 검증을 시도해보자는 당초의 계획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인해 이 프로그램으로 갈음해야했다.)

또 ‘탈곡기’에 미처 초대하지 못한 소수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장후보 온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시장후보 온더블록’은 유튜브의 특성상 방송 시간에 제약이 없다보니, 소수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선 부산MBC를 통해 지상파로 중계된 후보자 토론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를 하기도 했는데, 김영춘-박형준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온 원전 관련 공방의 경우,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시도해보기도 했다. 이는 “환경단체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박형준 후보의 발언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의도에서 환경단체와 통화를 시도해 그 내용을 함께 편집한 것이었다. (이 영상은 이후 박형준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 댓글에 시달려야했다.)

짧은 결론...

유튜브는 유튜브다. 비록 부산MBC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해도, 이는 기존 지상파 방송과는 다른 개념의 매체라 할 수 있다. 선거 보도 역시 유튜브에 맞는 내용이 제작돼야지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될 만한 내용이 플랫폼만 바꿔 탄 형식으론 누구의 관심도 받기 힘들다는 건 인정해야할 사실이다. 지상파 보도의 단순 잘라붙이기식 보도는 굳이 ‘뉴미디어’라 이름 붙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튜브를 통한 선거 보도엔 장점도 있지만 한계 역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레거시 언론에 요구하는 기계적 중립성에서 다소간 자유로울 수 있고, 더 유연한 방식의 선거보도가 가능하겠지만 흥미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라는 당위 명제에서 이탈하기 쉽다는 우려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의 직접 참여와 지역에 더 밀착된 선거 보도, 그리고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개표 방송이 가능한 점. 이런 유튜브 선거 방송의 강점은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로부터 좋은 선거 보도라고 선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라서 앞으로 계속 새롭게 시도되고 시험해봐야 할 걸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장후보 온더블록에서 손상우 후보가 한 발언-자신의 당선을 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게 아니라 우리 당이 선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왔다-은 시간 제한 없이 보다 자유롭게 후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유튜브 선거 보도의 존재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유권자를 위한 검증 방안

김천수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은 검증이다. 민주국가의 선거는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한다. 후보와 정당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정책에 대한 견해와 공약을 전하고 유권자는 미디어를 이용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처럼 미디어화된 정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와 정당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검증자의 역할을 맡는다. 언론의 검증은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언론의 검증은 공정해야 한다. 언론 활동에서 공정이란 편중되지 않고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전하는 것을 뜻한다. 선거 보도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검증 보도는 후보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후보 검증 보도는 후보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정보를, 정책 검증 보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우리 언론의 검증 역할은 미흡하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가 발표한 지난 부산 보궐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부산 언론은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보도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경마식 보도와 후보 동정 보도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선거용 정치공작으로 치부하고 추가 취재 없이 정당과 후보 간 공방만 중계하는 데 그쳤다. 특히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보다 후보의 해명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선거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점을 보였다.

정책과 후보에 대한 공정한 검증 보도가 어려운 이유를 언론의 안과 밖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안에서는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자의 이해가 부족해 공정한 검증 보도가 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했으나 의도적으로 공정한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언론 역할에 대한 기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재교육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기자가 저널리즘의 기본도 없이 민주주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따라서 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면서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의도성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희망적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의도적으로 공정한 검증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시민 사회와 언론단체

는 1992년부터 ‘선거보도준칙’을 수정·보완하며 보도를 감시하고 있으나 언론의 선거 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여 년간 선거 보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자가 준칙을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기자가 준칙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중심의 모니터링과 함께 기자 중심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그동안 언론사 중심의 평가로 인해 기자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할 기회가 부족했다. 그 결과 개인으로서 기자가 ‘패거리저널리즘’ 등과 같은 집단문화에 적응한 나머지 준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모니터링의 개인화는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민주주의와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바우처’와 ‘(가칭)기사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개인화된 기사 평가다.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이 좋은 기사에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칭)기사평가제’는 저널리즘 원칙에 기초해 기사를 평가하고 점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기자 실명, 기사 이력과 함께 제공하여 국민이 기사 작성자의 저널리즘 원칙 준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금껏 집단주의로 인해 잊혔던 개인으로서의 기자가 민주국가에서의 자신의 사명과 책무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와 언론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자질, 정책 검증의 난처함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선거 보도의 핵심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다. 언론이 이 핵심 사항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된 비판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고자 한다.

◇ 자질 검증

4.7 보궐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해’와는 달리 적어도 국제신문 사건팀 차원에서는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살펴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박형준 당시 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도 그 중 하나였다. 기자도 엘시티 인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박 후보의 아들·딸이 분양권 매수를 위해 프리미엄(P)으로 건넸다는 액수가 적정한 값이었는지 취재했었다. 이 과정에서 느낀 난처함 또는 곤란함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박 후보 자녀들이 건넨 P가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어야만 ‘엘시티 측이 따로 빼놓은 매물을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엘시티 인근 공인중개사 여럿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장과 달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엘시티는 미분양이 발생했었고, P는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챙기는 편에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엘시티 측에서 벌써 인근 부동산 입막음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기자 입장에서는 의혹 검증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당시 녹음한 목소리들을 따로 기사로 만들진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증언들을 보도해야 했을까? ‘던져진 의혹을 검증해 봤더니,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더라’는 식으로 말이다. 사안의 실제적 증언을 찾지 못한 기자의 무능이었을까.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부합하는 증언을 들을 때까지 탐문을 이어갔어야 했을까. 타사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기사(당시 미분양이 낮았고 P는 매우 낮았다)를 냈다가 시민사회로부터 호되게 욕먹었다.

◇ 정책 보도

국제신문은 선거를 맞아 ‘독한 청문회’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를 자리로 불러, 후보들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소명시키거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 발전상 등을 물었다. 비교적 출마가 늦었던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출연했다.

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생각 닮은 꼴 찾기'라는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었다. 참여자 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각 후보들이 밝힌 시사 현안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해 어느 후보가 자신과 가장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참여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양당 후보들만의 정책뿐 아니라, 진보당 노정현 후보부터 무소속 정규재 후보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정책 정보가 제공됐다.

한마디로, 지면의 한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정책 검증 시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와 관련한 보도 행태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지적과 유사한 논리로 다시 한 번 비판됐다. 정책 자체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검증은 특정 사상적 지향점에 부합하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닌 이상, 재원 조달 가능성이나 실현 현실성 같은 기계적이고 '재미없는'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 지면을 통해 이미 소개된 정책을 매일같이 몇 번이고 다시 소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푸념에 불과할 수 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거 보도의 핵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독자 중심, 유권자 중심 보도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을 그 누구보다 열독하는 시민사회에게 그 방법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론문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평가 관련 코멘트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수 유권자의 ‘정권심판’ 정서로 인해 네거티브나 포지티브가 전혀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 선거로 평가됨. 오히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라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네거티브 혹은 후보검증 관련 정보가 전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으며, 그 일탈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 더 많은 네거티브성 의혹이 쏟아졌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 부산시장 선거가 더 심하게 나타났음.

-선거보도에서 상업적 이윤논리가 지배하는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인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 이런 점에서 KNN과 같은 완전한 민영방송이나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이 지배적 양당에 대한 선거 기사 중심으로 보도 행태를 보이는 건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하지만 공영방송적 요소가 많은 KBS나 MBC의 경우에는 특히 군소정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균형감 있는 보도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캠페인 기간 내내 28개 주요 언론사 기사에 대한 빅데이터 댓글 버즈량 분석에서 박형준이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 갔으며, 댓글 기사의 공부정 성격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에서는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두 후보에 관한 모든 댓글이 약 95%가 넘는 수준에서 부정적인 성향의 댓글이 주를 이룸.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댓글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온라인 유저들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박형준후보에 대한 6대 의혹과 관련된 언론 관심은 철저하게 중앙 언론에 집중되어 왔음. 그에 반해 지역의 주요 언론들은 박형준 관련 의혹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집중보도나 후속보도들이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의혹 관련 네거티브가 지속성을 갖지 못했음. 또한 박형준 후보에 비해 김영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김영춘 후보의 경우 오히려 중앙 언론과 댓글에서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당의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부산 유권자의 심판 이전

에 이미 부산 지역언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불리한 언론환경 하에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간 것으로 보임.

2. 네거티브 선거 개선방안 관련 코멘트

-네거티브 선거는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공격하기 위해 음해, 비리 폭로, 약점 공개, 인신 공격, 흑색선전, 험한 표현 등을 통한 실수 유발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야 할 선거운동의 형태이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의 입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려운 선거운동 전략이기도 함. 네거티브는 선거에서 투표선택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정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후보자 입장에서 공약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전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비용 감소 효과를 갖고 있어 수요-공급 사이드에서 모두 활용도가 높은 전략일 수밖에 없음.

-네거티브 선거가 모두 부정적인 측면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님.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의 효과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이나 민주주의 정치제도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다른 맥락과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반대로 정치지식의 함양과 투표참여 촉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법체계 또한 네거티브가 가지는 다면적인 속성을 인정해 판례를 통해 “①후보자의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 ②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의혹을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④제시된 소명자료에 의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별할 수 없다”고 그 허용범위와 소명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 사법부의 네거티브 선거 관련 판례가 보여주는 바는 네거티브 선거가 유권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후보 검증과는 확연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하기 전에 먼저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의 명확한 차이를 선거관리 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적절한 연구용역 수행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상세하게 분류해서 언론이나 유권자에게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판례를 통해서도 일부 인정되는 네거티브 선거의 공식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식선거법으로는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방법

은 없음. 결국 후보자 청문회 등 제도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명직 공직자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도적으로 검증해 낼 방법은 투표를 통한 민심의 선택이라는 간접적인 방식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네거티브 선거를 근절하려면 네거티브 선거가 주는 비용-편익 계산식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먼저 편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선거에서의 득표나 당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네거티브 선거에 따른 편익은 높아질 것임. 하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네거티브 선거의 투표행태에 대한 영향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매우 혼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실증적인 차원에서 네거티브가 실질적인 득표 혹은 감표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의 편익이 유권자, 언론, 후보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펼쳐내기 어려운 편익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 유권자의 편익은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후보 선택의 중요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서 정보 획득 비용을 줄여주고, 언론에게는 유권자가 관심 가질만한 기사거리를 양산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주고 있으며, 후보에게는 직접적으로 경쟁상대에 대한 탈동원 혹은 자신의 지지세력에 대한 동원 효과를 동시에 높여주는 편익이 복잡하게 제공되는 편익 분배구조를 갖고 있는 바, 이 편익 분배구조를 해체하는 적절한 제도 개선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비용의 측면에서도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동하도록 할 경우 네거티브 선거에 의존하는 전략이 후보자의 선거 전략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가 네거티브 선거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지닌 후보 검증의 긍정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문제 제기한 쪽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심증적 의혹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어 네거티브 의혹 제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가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선거 후에 그것의 처리와 관련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빅데이터 & AI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한 후보검증 관련 자료의 신속하고 항시적인 팩트 체크 서비스를 선관위나 각 언론사에서 공공성 있는 선거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제공하되 팩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사실 관계 확인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언론 정보 수요자들이 쏟아지는 네거티브성 정보나 후보검증 관

런 요구에 대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

-정당 내부의 공천과정에서 별도의 네거티브 검증위원회를 두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의 결과를 정량화해서 해당 후보는 정당 내부 검증과정에서 어떤 정도로 검증된 후보인지가 경선과정에서 후보 선택의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본선에서의 경쟁 정당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네거티브 관련한 의혹을 털고 본선에 진출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본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네거티브 선거 양성화 정책'을 펼쳐 보는건 어떨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유권자는 중요하지만 언론은 사랑하며 후보들은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거티브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의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언론이 네거티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언론의 경우 네거티브를 통해 흥밋거리의 기사를 양산해 냄으로써 이윤을 챙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덧씌워 유권자들의 정치적 혐오감과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런 언론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 규범적 차원에서 선거 사후에라도 일정한 모니터링을 통해 rating작업을 해서 언론 관련 각종 공적 자원 지원 시 이를 비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경쟁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시민단체 차원의 감시와 처벌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예컨대 포지티브 선거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같은 공적 성격의 평가기관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을 개발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해서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중심의 별도의 공적 감시 및 평가기관을 결성해 언론과의 협업을 통해 후보의 네거티브 활동을 지수화해서 후보 선택 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아울러 그 평가의 결과가 정당과도 연계되어 다른 공직선거 공천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 이력이 공천상의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게 만드는 방법도 유효한 한 방법일 수 있음.

-재산신고 누락이나 학력/경력 허위 기재 등 고의에 의한 의도적 누락이나 허위신고 적발 시 대부분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면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처벌 조항을 보다 강화해서 더 이상 의도적인 누락이나 허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으로 선관위 산하에 별도의 후보 공보물 적시 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 기구를 두어 선거 중에도 불법/탈법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과정을 통해 네거티브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 나감으로써 후보검증 과정의 강화를 통해 네거티브 발생의 원천 요인을 통제하는 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성 평등 의제 사라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



△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연합뉴스, 3/24)

2020년 4월 23일, 부산시장이 사퇴했다. ‘집무실에서 직원 성추행’이 사퇴 사유였다. 그로 인해 치러진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약 253억의 세금이 쓰였다. 전임 시장의 개인 일탈이라 치부하기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었다. 무엇보다 시정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고위공직자인 시장에 의한 성추행은 개인 일탈이 될 수 없었다. 구조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2021년 3월 25일, 부산 거리 곳곳에 4·7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가 붙었다. ‘부산 살릴 경제시장’, ‘내게 힘이 되는 시장’... 그 어디에서도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알 수 없었다. 당헌까지 바꾸며 출마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후보 12명 중 5명이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앞에서 느꼈던 부산시민과 지역언론의 ‘부끄러움’은 정치권의 뻔뻔함 앞에 다시 한번 무색해졌다.

부산미디어감시연대는 4·7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했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라야 했다. 선거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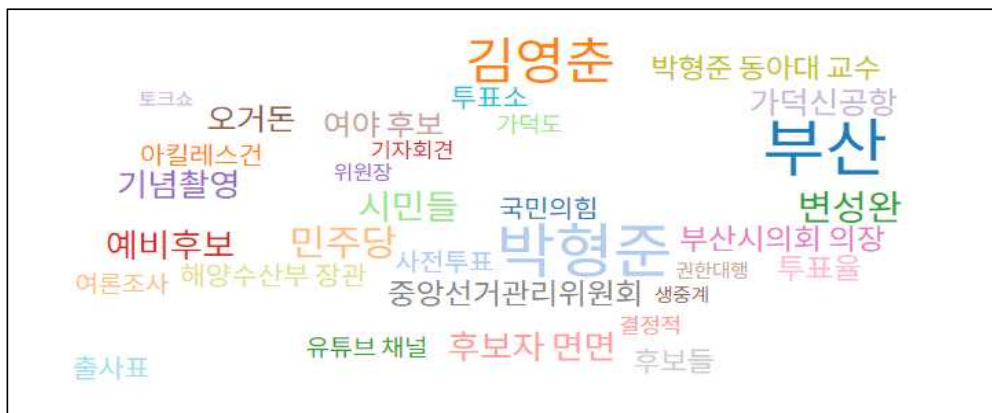
공약, 후보 덕목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선거는 끝났다. 과연 우리 부산은 선거를 통해 성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을까?

성평등 선거에서 가덕신공항 선거로

국제신문은 <젠더 이슈, 신인 돌풍, 부산진갑 리턴매치…120일 열전 관전 포인트>(12/9, 5면)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현직 시장의 성 비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도 과거와 다르다.”며 젠더 이슈를 4·7 부산시장 보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통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검색한 결과 국제신문 369건, 부산일보 569건으로 총 938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대부분 정당과 후보자 이름, 이력이었다. 그런 가운데 ‘가덕신공항(87번)’과 ‘오거돈(33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는 없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부산시장 보궐선거’ 검색 결과
(1월1일부터 4월7일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상)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오거돈’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는 122건이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촉발된 이번 선거’는 이라며 이번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역대 시장선거 득표율을 제시하면서 ‘오거돈’을 언급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가덕신공항’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는 293건이었다. ‘가덕신공항’은 키워드로 등장한 유일한 공약이었다. 부산의 주요 현안인 탓에 다른 공약보다도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한 결과였다.

선거의 원인이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아닌 개인 오거돈의 성폭력으로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과 제1야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성평등 이슈 놓고 경쟁하지 않은 정치인 이를 손 놓고 보기만 한 지역언론

성평등 선거가 가덕신공항 선거가 되는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 대상 공약이, 성평등한 부산시를 위한 정책이 두드러질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가장 앞서 제시된 공약은 가덕신공항과 어반루프였다.



△ KNN, 1/21



△ 국제신문, 12/28

좋은 선거보도는 좋은 정치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면, 이를 전달하는 선거보도 또한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지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보도에서 성평등 이슈가 실종된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성평등 공약·정책으로 선거에 임한 정당·후보에 있다.

다음 책임은 언론이다. 성평등 공약에 무심한 정치권을 검증하고 비판해 성평등 가치를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견인해야 했음에도 지역언론은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KBS부산은 '공약검증K', 부산MBC는 '공약대전' 선거기획에서 한 차례 후보 간 성평등 공약을 비교하는 데 그쳤다.



△ (좌) KBS부산(3/29), (우) 부산MBC(3/30)

후보의 성평등 관련 공약도 보도하지 않거나, ‘오거돈 처벌’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여성 공약이라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시 직속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핫라인 구축, 피해자 지원 신속성 강화, 오거돈 전 시장 엄정 대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온라인으로 기사를 냈고, 부산일보는 <이언주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전 시장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오거돈’을 강조했다. 공약의 내용보다는 정쟁에 치우친 제목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언주 예비후보의 2호 공약과 다른 후보의 성평등 관련 공약을 점검한 보도가 있었다. 국제신문 <성비위로 치르는 보선인데...남성 후보 성평등 공약 안 보인다>(1/27, 3면)는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꼽으며 남성 후보들의 소극적인 성평등 공약을 비판했다.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침묵, ‘성평등’ 이슈를 정쟁 도구로 사용, 성범죄 근절 대책 부재 등을 비판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돌봄’, ‘육아’, ‘출산’, ‘교육’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견고히 한 공약을 발표하면 이를 ‘여성 대상 공약’이라 전달한 다른 기사에 반해, 성평등 가치에 주목해 눈에 띄었다.



△ 국제신문, 1/27, 3면

언론이 외면한 최초

양당 여성정치인¹⁾ 시장 후보 경선 동시 참여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12명 중 여성후보는 5명이었고 그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의 후보로 여성이 출마했다. 지난 95년 민선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부산의

1) 여성유권자, 여성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유권자, 정치인의 기본값이 남성임을 견고히 하는 단어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선거보도에서 유권자와 정치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기에 불가피하게 ‘여성유권자’, ‘여성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박주미 후보가 유일하다. 후보의 모든 면면을 성별로만 환원시킬 순 없겠으나, 부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과소대표 돼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각 당 예비후보들이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막판 스피트를 올리고 있다. 왼쪽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박인영 김영춘 후보. 오른쪽은 국민의힘 박성훈 이연주 박형준 후보. 정종희 기자 jih@

△ <부산시장 보선 후보 이번 주 확정…여야 ‘운명의 카운트다운’>(부산일보, 3/2, 6면)

여당과 제1야당의 경선 후보로 여성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진 경우는 이번 보궐선거가 최초였다. 시장 집무실에서 버젓이 자행된 전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여성 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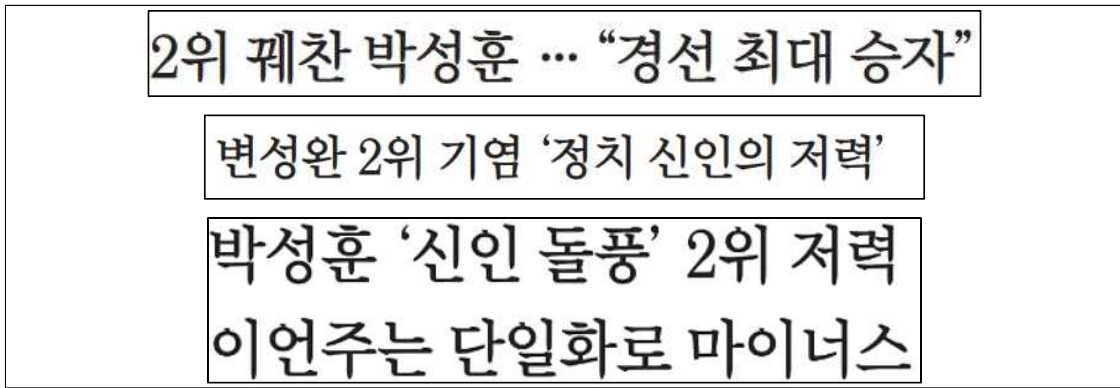
박인영, 이연주 두 후보 모두 이번 보궐선거의 배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신문 유튜브 콘텐츠 ‘독한청문회’에서 박인영 후보는 “권력 관계에서 여성은 늘 약자라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이연주 후보는 “부산의 가부장적 문화를 느낀다며 토목과 건설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씨 ‘사고’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여성 후보와 경쟁하는 게 껄끄럽다.” 혹은 “오거돈 씨 측근이 아니다.”라며 여성 후보를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발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보궐선거 배경에 대한 이해는 주요한 후보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목한 기사는 없었다. 성평등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여성정치인의 몫으로만 할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여성유권자와 비교적 동질한 경험이 있는 여성정치인의 입장을 이번 선거의 의미와 연결하는 시도가 미미해 아쉬웠다.

국민의힘은 3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6일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됐다. 지역언론의 관심은 경선 2위를 기록한 남성후보, 박성훈과 변성완에게 쏠렸다. 두 여성후보의 성과에 주목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최대 승자는 박성훈이라는 평가”, “경선이 진행될수록 그(변성완)의 저력이 두드러져”라며 남성정치인의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2) <이 얼굴들,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역사 쓸까>(국제신문, 12/29, 5면)
 “이번 보선이 전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치러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모두 필승 전략으로 여성 후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차기 행보를 도모할 동력을 얻게 됐다.”, “부산 발전을 이끌 새 리더를 얻은 것”이라 전망함으로써 새롭게 정치권에 등장한 두 남성정치인의 정치 생명에 활력을 더했다.



△ 3월 5·8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선 2위 후보 관련 헤드라인 모음

3월 8일 여성의 날에 국제신문은 <‘유리 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4면)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성 예비후보의 도전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이언주 후보의 ‘여성시장론’과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성폭력 제로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공약’을 언급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의 여타 공약, 선거 전략 중 성평등 이슈만을 콕 짚어 제시했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패배요인’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성평등 이슈를 지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웠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70년대생 젊은 여성 후보인 이언주 박인영 두 예비후보의 도전은 신선한 활력을 주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부산에서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각 박형준 김영춘 대세론을 뛰어넘기 위해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정책 역량과 콘텐츠를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거 이슈가 초반 ‘오거돈 성비위’에서 가덕신공항과 불법 사찰 등으로 전환된 것도 여성 후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차 반복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경선 후보로 ‘여성’이 동시에 참여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기사는 이런 의미에 주목하기 보다는, 여성 정치인의 도전을 ‘신선한 활력’쯤으로 평가절하 했다. 더구나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기에 젊은 여성 후보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성 편견을 강화했다. 정치권의 남성중심 문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데 대한 분석 없이, 이번 경선 결과를 여성후보의 역량부족으로만 분석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여심’, ‘구애’, ‘후끈’

여성유권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성평등 이슈를 선거 의제로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부족했다. 후보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내던 지난 1월 21일 부산지역여성단체 협의체 총연대는 <오거돈 성비위 부산시장 보궐선거 벌써 잊었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정책, 성평등 부산을 위한 비전이 실종된 것을 지적했다. 이를 저녁 뉴스에서 전달한 건 부산MBC가 유일했고 KBS부산은 뉴스광장에서만 보도했다.

3월8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평등 의제가 실종됐음을 지적했다. 이를 전달한 건 부산일보 <“절박한 성평등 의제, 정작 부산시장 보궐선거선 실종”>(10면)가 유일했다. 또 3월26일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김영춘·박형준 두 후보의 서약식 역시 KBS부산 뉴스7에서만 단신소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성 평등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1월 21일, 3월 8일, 3월 26일 기자회견 모두 단신으로 전달하거나 주요면이 아닌 면에 배치했다. 성 평등 선거가 되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이 주목한 성 평등 공약 중 하나는 ‘여성 부시장’이었다. 부산일보 <부산시장 보선 이후 ‘여성 부시장 시대’ 열리나>(2/10), KNN <보선 이후 ‘여성 부시장’ 시대 열리나>(3/21)는 김영춘·박형준 후보의 여성 부시장 임명 공약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다른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성 평등 공약 중에서도 ‘여성 부시장’ 실현 여부에 주목해 눈에 띄었다.

한편 여성유권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다. 부산일보 <“여심 놓치면 승리도 놓쳐” 후보들 여심 구애전 후끈>(2/10, 5면)은 여야 후보의 여성 유권자 타깃 공약을 정리한 기사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은 ‘여심’, 후보의 공약은 ‘구애’, 후보 간 공약 경쟁은 ‘후끈’으로 정리한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여성유권자를 연애 대상으로 성애화한 제목 짓기는 지양해야 한다.

“여심 놓치면 승리도 놓쳐” 후보들 여심 구애전 후끈

여성 부시장·성폭력 제로부터
손주돌봄수당·병원비 0원까지
‘표심 잡기’ 다양한 공약 내놔

“여성의 힘으로.”

여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여성표심 공약 대결이 치열하다. 대부분 의 부산시장 후보들은 육아·보육·양성평등 등 여성 관련 정책을 한 차례 이상 발표했으며, 추가 공약도 준비 중이다.

‘전제 부산시장 선출’과 ‘국민의힘 적합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국민의힘) 동아대 교수는 함께 키우고 함께 일하는 양성평등과 복지도시 부산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온 아이를 3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산·육아 대책을 내놨다. 박 교수는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을 총괄할 ‘여성 부시장’ 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합도 1위’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여성·가족·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부산’으로 명명된 이번 공약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구 신설과 사회경제 활동 지원은 물론 여성·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연주 전 의원은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성폭력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의원은 부산시 지속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금담과 조순 가정지원, 영유아 수당 지급,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 병원비 0원’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고, “부산시 거주 영·유아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단한 감기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 모든 영·유아의 병원비를 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매년 30개 이상 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 전환, 3년 내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 확충, 10년 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70% 달성 등 ‘3-5-7 프로젝트’를 내놨다. 또 ‘부산형 어린이 안심 보험’ 도입과 ‘손주 돌봄 수당’ 신설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의장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공보육 혁신도시 부산’을 목표로 공공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한 뒤 ‘긴급사이버 학원’과 ‘긴급돌봄보육센터’ 사업에 2000억 원의 예산을 긴급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부산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여성표심 공약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성 유권자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다,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많기 때문이다

권기택 기자 kkt@

△ <부산일보>(2/10, 5면)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 이행은 이제부터가 시작

선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이다. 박형준 시장의 5대 공약에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고위공직자 성폭력처리센터 설치’가 포함됐다. 또 박 시장은 2월 2일 여섯 번째 공약 중 하나로 ‘여성정책 총괄 여성 부시장직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보름이 지났다. 박형준 시장은 인수위를 대신해 부산의 비전을 구상하고, 시정철학을 구체화할 외곽 조직으로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핵심 과제는 그린스마트 도시 육성, 인공지능 집중 개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이었다. 성 평등 의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성비에서조차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 부산일보, 4/13, 3면

성 평등 이슈가 실종된 선거가 성 평등 이슈가 실종된 부산시정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2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고위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데 서약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오거돈 성추행’으로 드러난 부산시정의 문제는 분명 개인의 서약과 약속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성 평등 관련 공약이행에서부터 성 평등한 부산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를 지역언론이 잘 견인해 주길 당부한다.

<끝>